

IIRI Online Series

한국 안보에 중국의 존재는 무엇인가?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2021. 5. 11

한국 안보에 중국의 존재는 무엇인가?



주 재 우 |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내년이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어느덧 30년이 된다. 한 세대라는 시간이 지난 즈음, 한·중관계를 성찰할 때가 됐다. 특히 중국은 과연 한국 안보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이다. 왜냐하면 한·중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국력의 비대칭성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부상으로 우리의 안보 역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심심치 않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공세적인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약체)’를 주도하면서 역내 자유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세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여에 귀추가 주목되면서 안보 분야에서 한·중관계의 변곡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태전략’과 ‘쿼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의 동의를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신봉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 가치와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를 불가분한 것으로 스스로 각인하고 있다.

우리의 이분법적 전략사고 무용론

그래서 파생된 우리의 전략적 사고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이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이분법적 논리의 지배를 받았다. 애당초 안보와 경제를 따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어불성설과 같은 사고가 우리를 지배했다. 물론 ‘정경분리’를 표방하는 중국외교의 특성상 이런 주장은 처음에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인 설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이유이기도 했다. 즉, 중국의 ‘정경분리’ 원칙의 근간을 모른 채 ‘안미경중’의 사고로 미국과 중국 외교를 펼쳤다.

중국 외교가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하나다. 중국이 공산국가이고 사회주의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중국은 자신의 ‘핵심이익’ 개념을 소개했고, 이의 도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치와 경제를 일치시켜 버렸다. 보복성 제재와 유사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정경일치’를 이용한 것이다.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역대 정부는 한·중 간의 ‘정경분리’ 관계를 ‘정경일치’로 전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 주변지역의 지정학적 전략관계는 복잡해졌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의 실체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중국의 신기루에 현혹되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중관계 30년은 다음과 같은 중국의 여섯 가지 안보실체를 유념하며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세 가지 내재적 안보실체

첫째, 중국은 공산국가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이념과 가치로 무장된 나라다.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가 『국제정치에서 인식과 오인』의 책에서 주장하듯, 이렇게 다른 이념과 가치의 지배를 받는 중국의 인식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보의 수집 및 여과 과정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종하는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인용한다는 뜻이다. 즉,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

고 싶은 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정보의 여과 과정을 통해 인식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의 안보와 위협인식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일련의 대북 군사도발에 대해 중국이 보여준 입장과 인식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중국의 최대 외교목표는 주변지역에서 외세의 존재를 퇴격하는 것이다. 이는 1949년 중국의 건국 이후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 냉전 시기에는 이 같은 갈망이 '반미, 반제국주의 타도와 격퇴'라는 정치군사적 기치로 표출됐다. 탈냉전 시기에는 '외세(foreign influence)'나 '외부요인(foreign factors)' 등으로 재포장됐다. 그리고 외세의 침투를 허용하는 주변지역의 '마지노선'을 서태평양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등으로 설정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해결방식의 하나로 2017년에 '쌍궤병행(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 동시 진행)'을 주장한 것도 이런 외교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북·중 양국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유엔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창한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북한 일변도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데 있어 중국은 남북한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에게서 외세의 간여 없는 한민족 간의 합으로 이뤄지는 피상적인 개념의 자주평화 통일 방식을 지지한다고 한다. 북한에게는 김일성 때부터 주장한 고려연방제, 즉 북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한다. 중국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세 가지 대외적 안보실체

첫째, 북한문제에 있어 중국의 행동 속성은 수동적이고 반응적이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북한 핵위기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강한 압력과 압박 없이는 중국의 주도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1차 북핵위기 사태부터 6자회담의 개최

와 북·미 정상회담까지 중국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경제제재 등의 압박 위협이 있을 때만 중국은 마지못해 반응했다. 왜냐면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나 폐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북·미대화나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다. 중국은 실로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일수록 북한의 이탈, 상실 또는 유실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관계를 통제, 감시하고 이의 발전 속도 조절을 위해서라도 중재 역할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접근이 있을 때마다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우리의 바다에 대한 통제 욕심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은 필리핀해협, 대만해협, 대한해협과 라페루즈 해협(소야해협) 등 네 곳뿐이다. 이 중 대한해협과 라페루즈 해협 등 두 길목은 우리 바다를 통해야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전략 작전개념은 우리의 바다를 자신의 통제와 제해(制海) 대상으로 규정한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사령원 류화칭(劉華淸)이 작성한 <해군전략과 미래해상작전>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양작전전략의 지리적 방어 개념을 정의했다. 지역을 근해, 중해, 원해로 나눴다. 근해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200해리 내를 의미하나 중국에게는 무의미하다. 이의 주권 범위가 200해리를 넘어도 중국은 자신의 영해로 간주하고 이를 근해 작전개념의 방어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제1도련선 이내의 발해, 황해(우리의 서해), 중국의 동해와 남해 등이 대상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중해(中海) 범위는 1987년 류화칭의 <해상교통선의 작전문제>라는 연설에서 소개됐다. 200~600해리 내의 모든 해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2도련선 내의 해역을 북·중·남 등의 3개로 다시 나뉜다. 북측 해역은 일본해(우리의 동해)와 라페루즈 해협, 남측은 남사군도에서 말라카해협 등 남중국해 전역으로 규정됐다.

영해와 영공의 범위는 거의 평행적으로 대칭된다. 상기한 개념으로 중국이 자신의 해상방위지역을 설정한 이상 이 범위는 영공방위지역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우리의 영해와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에 항의해도 개의치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해상작전 전략개념에서 우리의 바다와 영공의 전략적 의미는 자유로운 항해를 위함이 아닌 태평양의 자유로운 진출입 권리를 수호해야하는 결정적 목표를 내포한다.

셋째,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일본을 두려워하는 전통적 인식을 러시아와 공유한다. 중국은 외세와 단 세 개의 동맹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의 공통점은 동맹국이 러시아였으며 동맹의 대상은 일본이었다. 1896년의 청·러밀약, 1945년의 중화민국과 소련의 조약과 1950년의 중·소 우호동맹조약의 제1조에 일본이 대상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을 미·중관계의 정상화 협상과정에서도 활용했다. 대만과의 동맹 포기와 대만 주둔 미군의 철수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동시에 관철하려 했다. 이는 남한의 미국과의 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이에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닉슨(Richard Nixon)은 중국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권력공백을 채워줄 잠재적 국가를 신중히 생각하라며 응수했다. 일본을 의미한 것이다. 중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계기였다. 또한 미국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우리 안보의 기본, 즉 영토주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동아시아 안보문제가 지정학전략 개념으로 회귀하는 역사적 아이러니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리적 공간 및 위치와 중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안보 인식 및 전략구상 간의 관계를 직시해야 한다. 만약 독자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의) 독 안에 든 쥐” 신세로 전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따라서 ‘인태전략’과 ‘쿼드’의 참여는 전략상 우리의 불가피한 현

실적 선택으로 귀결된다. 미·중 경쟁에서 우리의 안보는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리적 안보 현실과 중국의 안보 실체가 암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영토와 안보 주권을 지켜낼 수 있어야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셋째, 공산국가인 중국과의 선부른 안보타협은 금물이다. 중국과의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불허)과 같은 경솔한 ‘약속’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앞으로는 이런 경거망동을 지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 주권과 이익에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결과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인태전략’과 ‘쿼드’ 참여를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년 전 한·미·일 동맹 불가 약속을 무조건 한 것이 우리 안보전략상 자충수였다. 결국 오늘날 우리 안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구상과 목표, 즉 주변 지역의 외세 축출 목표와 중국 포위망 타파 등 중국의 의도를 알아챘어야 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포위망에 대한 ‘공포증(phobia)’을 가지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냉전시기 내내 중국은 미국(5~60년대)과 소련(7~80년대)의 포위망에서 극도의 안보위협을 체감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심리와 일본에 대한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 ‘인태전략’과 ‘쿼드’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선택지를 제시하며 압박해야 한다. 중국에게 물어야 한다. ‘인태전략’과 ‘쿼드’를 일본과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우리와 한·미동맹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를 말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우리의 대 중국 안보 레버리지를 증강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끝/

저자 소개

주재우 교수는 미국 웨슬리언(Wesleyan)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안보정책연구소(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무역연구소(현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연구원을, 국립싱가포르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미국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와 조지아공대(Georgia Tech)에서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2003년부터 경희대 중국어학과에 재직 중이다. 2021년 4월부터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중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중국외교, 미중관계, 북중관계와 다자안보 등이다. 저서로는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6.25전쟁에서 사드갈등까지 (2017)』,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전략(2018)』 등이 있다. (Email: jwc@khu.ac.kr)

